

## ‘광주의 슈투트가르트’ ‘기아 시티’ 탄력 받는다

<자족형 자동차 기업도시>

광주시가 구상중인 ‘기아 시티(KIA CITY)’ 조성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광주 등 광역시도 기업 자족형 도시인 ‘기업도시’를 늘려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와 청주경제혁신센터로 묶인 현대차그룹의 수소차 생산기지 등에 대한 신규투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기업도시 지정 완화를 놓고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반발하는 광주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여론 무마음’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기업도시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복합개발을 위한 용지율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지정요건 완화  
광역시에도 조성 가능  
시, 297만㎡ 규모 구상중  
자동차 도시 재편 가속**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세종·광주·아산·천안 등 충청권 13개 시·군에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공장·연구시설·관광시설 등 주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을 30%로 완화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주 등 광역시에 대한 기업들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과 수소차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자동차산업밸리 조성을 추진중인 광주시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시는 특히 그동안 구상해온 ‘기아 시티’ 조성 계획이 기업도시 조성 완화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6기들어 벤츠로 유명한 독일 슈투트가르트를 롤 모델로 삼고, 광주를 자동차 도시로 재편하는 등 ‘제철개선’에 나선 상태다.

시는 현재 조성중인 빛그린 국가산단·진곡산단 또는 평동 포 사적장, 광주 군 공항 이전 부지 등을 대상으로 기업도시형

‘기아 시티’조성 계획을 고민중이다. 시는 일단 기반시설 66만㎡, 완성차 및 부품업체 클러스터 142만㎡, 인프라 62만7000㎡, 테마파크 26만4000㎡ 등 297만㎡(90만평) 규모로 구상중이다.

시는 ‘기아 시티’내에 친환경 완성차 생산라인과 연계해 독일의 자동차 테마파크인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를 모델로 한 자동차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전시장과 박물관, 새차 보관장, 새차출고장, 브랜드별 전시장, 운전체험관, 어린이 교통문화관 등을 건립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계획이다.

기업도시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의해 기업도시 특구를 지정하고, 자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단지~연구개발(R&D)~문화~교육~주거~관광 타운’ 등을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로, 세계적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와 일본 도요타시, 미국 디트로이트 등이 유명하다.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사례가 대부분 자동차 산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광주시가 구상중인 ‘기아 시티’의 성공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광주시의 ‘기아 시티’조성 계획은 기업도시의 성격과 대부분 일치한다. 광주의 특정 지역에 생산부터 연구, 거주 등 자동차 관련 자족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아 시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광주시 전체가 ‘기아 시티’로 변모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구상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내 자동차 산업 연간 매출액은 8조원 규모로 지역 총생산의 30%를 웃돌 정도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라면서 “광주는 사실상 국내를 대표하는 자동차 도시로 전환된 상태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기아 시티’ 조성”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 편입 062)605-1114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신학대학원 편입 062)605-1115  
원서접수 1. 26(월) ~ 2. 2(월)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1일 오후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우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유장현 광주시장과 박해자 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날벼락 노선변경... 지역싸움 붙여놓고 ‘불구경’

**광주-전남 대도약의 해를 열자  
<4> 호남고속철 개통**

**정부 노선 갈등 해소 나서야**

호남고속철도(KTX) 노선 최종 결정일(6월)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호남-대전간 갈등을 잠재우고 조기 개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달 6일 ‘호남고속철 종합운영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국토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후 코레일은 요금 및 운행 시간표를 관보에 고시한 뒤 개통 1개월 전부터 인터넷 예약을 받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연계 열차 운행 등도 조정해야 한다.

절차대로라면 3월 개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4월 개통마저도 불투명하

**개통 코앞 서대전 경우 논의  
호남·충북지역 등 여론 격양**

**균형발전 본래 취지 살려야**

호남고속철도(KTX) 노선 최종 결정일(6월)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나서 호남-대전간 갈등을 잠재우고 조기 개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나서 낙후된 호남권 활성화라는 본래 고속철 건설의 취지를 온전하게 살리며 신속하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1일 오후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유장현 광주시장과 박해자 시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우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도 이날 목표역 광장에서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 광역·

기초의원,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우 반대 캠페인을 펼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또 2일 오후 전남도와 전북도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미래포럼”도 1일 성명을 내고 호남고속철을 애초 계획과 일정대로 오송-광주 신선 노선으로 개통해 KTX 열차의 정상 운행을 개시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포럼은 “정부가 소신 없는 행정으로 지역갈등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원칙 재확인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서 나아가 호남고속철 개통을 지역화합, 국민통합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며 서대전역 경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포럼은 또 “철도,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 기보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이 제는 상식”이라며 “시장논리를 앞세워

호남을 또 차별하려는 사고와 행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호남권의 반대 여론이 정치권으로 확산하자, 그동안 “서대전역 경우 편수를 50%(코레일인 20%)까지 늘리겠다”고 호언해온 권선택 대전시장이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과의 연석회의를 제안하는 등 ‘호남 달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29일에는 대전고 출신인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이 광주시를 방문, 유장현 광주시장에게 서대전역 경우에 대한 양해성 발언을 해 논란이 휩싸이기도 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끼리 만나서 해결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호남고속철 건설의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 계획을 승인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새정치 총선 공천선거인단 국민 비율 50% 이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총선 공천 경선 선거인단 가운데 일반 국민의 구성 비율이 높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선 후보자 공천을 위한 경선 선거인단 구

성비율 ‘국민 50% 이상·당원 50% 이하’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정은 ‘당원 50% 이상’인데 이를 ‘이하’로 바꿔 국민 비율을 늘릴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대선 애초 개정안인 ‘국민 60% 이상, 당원 40% 이하’보다는 당원 비율을 다소

늘린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준비위는 이 같은 경선 규정을 현행 당규가 아닌 당헌에 못박기로 했다. 차기 지도부가 쉽게 공천 료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3일 당무위원

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준비위는 을지로위원회의 명칭을 ‘을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로 바꾸고 출임 명은 그대로 쓰기로 했다. 현행 특위인 농어민위원회는 전국위원회로 격상하고 소상공특위 및 청년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에 나서는 42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The New C-Class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신성자동차(주) 광주지사  
신성자동차(주) 광주지사  
신성자동차(주) 광주지사

신성자동차(주) 광주지사  
신성자동차(주) 광주지사  
신성자동차(주) 광주지사

신성자동차(주) 광주지사  
신성자동차(주) 광주지사  
신성자동차(주) 광주지사